

남원에 가금특화사업 추진

하림, 대규모로... 이용호 의원, 김홍국 회장과 특화 방안·투자계획 논의

하림그룹은 남원에 대규모 친환경 가금산업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3일 남원 축협조합 사무실에서 강병무 축협조합장, 남원시의회 강성원, 김성기, 김승곤, 왕정안 의원 및 하림 육계농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가금산업 특화 방안과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김 회장은 이어 투자 후 보지지역인 사매산업단지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표적인 호남기업인 하림그룹 측과 남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의원은 남원이 AI 청정지역으로 닭·오리 등 식품 산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하림의 식품 가공 산업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하림 측은 사업 추진 방안, 투자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김 회장은 이날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향후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은 지리산을 비롯한 전체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AI의 침입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

남원이야말로 친환경 가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며 "이번 하림의 현장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림과 남원이 함께 발전하며 가금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회장은 이에 화답하며 "건강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먹거리야말로 소비자들이 바라는 트렌드이자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남원의 깨끗한 환경과 하림의 경험과 기술력을 합쳐 친환경 식품산업을 현실화시킨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비정규직 150명 정규직으로 전환

전주시설공단

전주시설공단이 최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57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은 지난해 1~2차 정규직 전환자 93명을 포함, 총 15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공단은 2017년 7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3차례의 컨설팅 사업참여 및 외부인사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5차례 열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 57명은 2일~3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단의 비전 및 경영철학의 이해, 4대폭력 예방 및 친절서비스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전성환 이사장은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이 만큼 앞으로도 맡은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6월까지 신청을

전북도, 건고추·생강·노지수박 등 지역농협서

전북도는 민선6기 삼각농정 핵심사업인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감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별의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특히, 작년까지 시군 통합마케팅 전 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출하 기관을 운영하는 '지역농협'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유통에 역량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전북도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 4월초 청명·한식과 주말을 전후하여 큰 산불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 감시인력 집중 배치로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 공무원 1/3이상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지정된 담당구역 마을 순찰

과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계도방송을 1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한다.

아울러 입산자가 많은 모악산, 마이산, 내장산 등 도내 주요 유명산과 산불취약지역 등에 입차철폐기 3대를 이용하여 공중 감시활동 및 산불조심 계도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2일에는 쓰레기,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중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도내에서 3건(고창 심원, 완주 봉동, 김제 금산)의 산불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4·3 해결 약속... 키워드는 '치유'·'회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지 대통령 으로서는 12년 만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내놓은 메시지는 '치유'와 '회합'에 방점이 찍혔다.

4·3에 대한 완전해결 약속을 재확인하며 희생자 및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한편, 역사적 비극인 4·3을 교훈삼아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서자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이후 4·3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다.

특히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4·3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4·3은 '미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와 남한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한 항거'라는 시각과 '남로당이 일으킨 반발과 폭동'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4·3 뒤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이 붙지 않는 것도 '항쟁'을 주장하는 쪽과 '폭동'을 주장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3만 명이 달하는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했다는 데는 양쪽 시각 모두 대체로 동의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 역시 '4·3'의 명칭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제주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극의 책임은 국가권력에 있다고 보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4·3이 국가폭력의 결과

정부 차원의 조치 ▲배·보상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산물이었던 4·3을 완전히 해결해야 이념 갈등의 늪은 틀에서 벗어나 평화와 회합의 길로 나아갈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 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에 대한 '직시'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언급했던 표현이다. 과거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문제를 매듭지을 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도 가능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이라며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념 갈등 극복' 호소 4·3 국가 책임 인정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번째 유해발굴, 배·보상 등 약속

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해 배·보상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유해발굴사업 ▲유족 및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